

# 민실위 보고서

2012년 10월 4일(목)

## 대선 보도,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다!

MBC가 또다시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취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 때문이다. 이 사안이 보도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더라도 이번 보도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었다.

### 1. 반론 없는 의혹제기

<뉴스데스크>는 1일 첫 보도에서 안 후보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 후보 측의 반응을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만 전했다. 사실상 안 후보 측의 반론은 전혀 없는 채로 리포트를 방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취재기자는 ‘안 후보 측의 반론을 <뉴스데스크> 방송 10분 전인 오후 8시50분에야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반론을 방송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는 안 후보 측의 책임인가? 아니면 MBC의 책임인가? 안 후보 측은 ‘방송 1시간 전인 8시쯤에야 (MBC기자가) 취재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취재기자는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에게 야당 출입 기자를 통해 ‘오후 6시40분쯤 취재 내용을 통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론을 말해 달라고 했고, 통화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학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일’이고, 상대가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방송 하루나 이틀 전에는 의혹의 내용을 미리 통보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반론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의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더구나 이는 MBC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반론을 일찍 받아야 방송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론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의 반론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제3자에게 재차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기된 의혹과 반론 중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 방송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아니면 아예 방송을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두 시간 전에야 반론을 요구한 것은 분명 MBC의 잘못이다.

심지어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부장은 안철수 후보 측의 반론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론도 없는 리포트를 두고 자리를 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민실위 간사는 정치부장과 당일 데스크를 맡았던 야당 반장에게 세 차례씩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 이전의 MBC뉴스는 의혹 제기와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어떻게 다뤘을까? 지난 2007년 1월 <뉴스데스크>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룰 때 이 전 총장의 반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 전 총장 제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도했다. 또 2008년 6월에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혹의 내용과 반론을 거의 1:1 비율로 다뤘었다.

특히 같은 달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던 손숙미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할 때는 반론을 듣기 위해 취재기자가 직접 의원실을 찾아 가기도 했다.

#### 2008년 6월 25일 <뉴스데스크>

혹시 96년 조사결과를 8년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또 그렇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건 아닌지, 물어보기 위해 손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1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렸지만, 손 의원 측은 공식적인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SYN▶ 손숙미 의원 보좌관

(“의원님 인터뷰가 어떻게 안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하시죠 뭐. 일단은 안하는 걸로 해주구요. 다음 기회에 (인터뷰)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손 의원 측은,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해명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 전문가 의견은 어디에?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은 일반 취재기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추구하는 객관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를 동안 전문가의 인터뷰를 한 번도 방송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월 신경림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SBS와 KBS가 각각 <8시뉴스>와 <뉴스9>에서 보도할 당시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의 인터뷰를 리포트에 넣었던 것과 대비된다. 물론 MBC <뉴스데스크>의 2008년 6월 청와대 정진곤 수석의 논문 표절 보도처럼 MBC도 예전에는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 인터뷰를 리포트에 넣은 예가 많다.

이에 대해 취재기자는 '제보를 한 교수가 취재원 보호를 요청했다. 또 이와 관련해 자문을 해줬던 다른 교수들도 유력 대선 후보의 논문에 대해 얼굴을 드러내 놓고 문제제기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변조나 자막 처리 등을 통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나 자문해 줬던 교수들의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어야 옳았다.

공영방송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증 보도 과정은 조그마한 흠결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바로 편향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종보다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우선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